

장동혁의 ‘당협 물갈이’ 제동… 국민의힘, 직선제 결론 보류

이르면 27일 최고위서 재논의 전망
조강특위, 전체 당협 재선출 제안
현역 의원 반발에 지도부 고심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협의했으나 끝내 결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르면 오는 27일 최고위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임기를 기존 관례대로 일괄 연장하는 대신, 당원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 투표 없이 기존 위원장이 계속 임기를 이어가고, 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에 한해서만 새 위원장을 뽑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전체 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간주해 당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당협위원장을 전면적으로 새로 선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당 지도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임이자 정책위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광한, 김민수 최고위원, 정점식 원내대표, 장 대표, 임 정책위의장,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 /뉴시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며 “공개된 회의에서 보셨겠지만 일부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꺼낸 의도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일부에서 그 진정성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특정 계파를 겨냥한 교체로 비치치 않도록 관련 안건을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책임 당원 투표 50%와 지역 주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말하자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갖는 모양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인 결론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대표께서 그리고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개혁이나 아니면 현행 제도를 좀 더 활용해보겠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이후 더 활발한

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는 당협위원장은 ▲전당원 선거 ▲책임 당원 선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 ▲기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협위원장의 전면 교체 가능성을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당협위원장을 전면 교체하면 수도권에서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영남권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를 꺼내 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당에 본인의 사람들로 채워야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김·장 “자주 보자”… 대법원장 논란엔 이견

(김민석 민주당·장동혁 국회 대표)

여야 대표 첫 상견례 화기애애
대법원장 문제엔 날 선 신경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첫 회동을 마쳤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아 장 대표를 예방했다. 양당 대표는 지난 17일 김 대표가 선출된 후 처음 만났다. 장 대표가 김 대표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하며 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민석 대표는 “저는 장 대표를 좋아한다”며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리더”라며 장 대표를 치켜세웠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함께 했던 교차의 영역이 있는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 대표의 역할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은 장 대표와 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 정례화, 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김 대표는) 총리도 경험하셨기에 국정 운영 경험이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 국민의 삶과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되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은 함께 감당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야당 대표와 대화의 다리를 놓아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뉴시스

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그런 만남이 이어지고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런 여야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장 대표는 “처음 뵙는 자리기 때문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만 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대법관 제정 논란 ▲미래대응기금 신설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했다.

대법관 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간의 갈등 사례를 들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반이라는 신념에서 노 전 대통령은 대법관 제정을 수용하고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결단을 감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긴 한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고 응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제가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절차에

천착해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의 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조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10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과 세수의 50% 정도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여야가 논의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주택 정책만큼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질서에 기반해서 정책을 펼치되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전제 위에서 정책을 펼치고 시장 질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민주 ‘대통합추진단’ 출범… 범진보 연대

단장에 박범계 의원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 직속으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범민주진보진영 연대 및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 정당 대표 예방 사실을 전하면서 “제10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대표 직속 TF(태스크포스)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또 TF 산하에 진보연대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 확장분과(공동위원장 이소영·황명선)를 설치한다. 김 대표는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통합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TF 구성 이유에 대해 “진보·혁신당 등과의 연대가 필요한데, 진보개혁 진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는) 창구 역할이 필요해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방식 문제를 개선하는 ‘전당대회 평가 및 전당대회 제도 개선 TF’를 설치한다고 했다. 권역별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후에 합동연설회 당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나 여론조사 등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평가 및 전대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낸 지시를 해 놓았다”며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브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특별감찰관에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제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으로 검찰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10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특별감찰관제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최길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추천), 최용훈 변호사(대



한변호사협회 추천) 등 3명에 대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가결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예진 기자